

교육개혁의 기회,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

교육의창

하정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어대명.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가 벌써 너무 뻔하다. 어대문 때도 그랬다.

하지만 순탄하게 축복받으며 대선가도를 걸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까지 받으며 낭떠러지로 내몰리곤 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도 없이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것도 같지만, 앞으로 이재명이 걸어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당명까지 바꾸며 국정농단을 부끄러워했던 그 정치세력이 지금은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어차피 질 선거를 포기한 친윤 세력이 당권마저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들 한다. 그보다는 사법 리스크로 대선판을 흔들고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하면 ‘쓰리고에 피박’으로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공산이 크다. 그 모두가 물거품이 된 지금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교육 공약을 만들며 이재명 캠프에 있을 때, 국회 보좌관이었던 대학 친구를 만났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의 인연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친구다. 그 이력 때문에 선후배들에게서 미움받고 많이 힘들었지만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 더 기가 찬다고 했다. 청산할 능력도 없으면서 내로남불로 이념 갈등만 부추기다가 결국 정권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고. 수구 세력들은 그때 배웠다. 탄핵을 당해도 더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어야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나 나나 똑같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조국 사태가 보여줬다. ‘너희

들도 마찬가지’라는 방패라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정권 내내 지난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고 여당을 비판했지만 지지세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통쾌해했다.

지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을까? 탄핵은 훨씬 앞당겼겠지만 그만큼 여야 갈등과 국론분열만 더 첨예해지고 개혁입법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었고, 교사의 참정권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오히려 정시비율을 더 높이고 고교학점제나 대학 개혁,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중대사는 다 다음 정부로 미루어버렸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도 하지 못한 일, 하지 않았던 일을 내란을 벌이고도 당당한 이들 앞에서 해내야 한다. 이제 절대다수의 의석까지 갖고 있으니 민주당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을 추어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가 8대 교육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대선 당시 교육대전환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며 함께 만들었던 공약과 별 차이는 없다.

진일보한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워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김종영 교수의 주장 그대로다. 김종영 교수는 모두가 SKY를 향해서만 도로를 달리니 교육지육이 벌어진다고 보고, 극심한 지위경쟁이 일어나는 병목현상부터 없애는 것이 입시개혁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것도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졸업생들이 휴렛팩커드, 야후, 구글,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실리콘 그래픽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직접 창업했던 캘리포니아대학체제를 참고했다. 스포트

니크 충격에 빠진 미국이 1960년대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7배나 늘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도 3~4조의 예산이면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2022년 대선처럼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교육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민주당에게 교육정책은 논란만 일으키고 표에는 도움이 안 되는 뒷전의 일이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우선 순위로 올리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삼을 뜯 수가 없다. 제대로 쓰이지 않은 역사와 친일잔재만 문제가 아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온 지금의 기득권 세력도 만만치 않은 개혁의 걸림돌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좋은 말로 박수받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 지금처럼 먹고 살기가 힘들수록 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진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져도 그것을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 가진 것마저 잃으면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 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자. 교육도 아닌 경쟁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밀도 끝도 없는 분노로 친구와 교사를 위협하다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교사는 교직을 떠나고 싶어하고 부모는 사교육비 걱정에서 쉬 잠들지 못한다. 세수감소로 교육예산은 줄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는 우리 교육청 예산보다도 더 많이 늘었다. 서로를 고통으로 내몰고 쓸데없는 경쟁으로 이웃과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일에 돈을 쏟아붓는 어리석음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고통에 허덕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멈추면, 나만 멈추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서로를 믿고 굳은 결심으로 이번에는 꼭 교육개혁을 이루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오월정신’ 헌법 수록

여·야 후보 모두 수록 의지 보여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오월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5주년. 헌법 정신으로 승화된 5·18민주화운동이 3·1운동과 4·19혁명을 이어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견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4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썼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선거대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해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적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오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5·18이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부

추기는 소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선 안 된다.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지켜낸 시민의 힘은 헌법에 수록된 3·1독립운동이나 4·19혁명에서 보여준 시민 정신과 맞닿아 있다. 단순한 법률로서의 헌법을 넘어 국민 권권과 인권 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민 통합의 상징인 헌법전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의 책임의식을 전달한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12·3 계엄에서 목격했듯 민주·평화·인권은 민주적 절차가 무너질 위기에서 견제와 시민 참여를 이끄는 동력이다.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큰 진전이고,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만큼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산업현장 잇단재해, 시스템 전면 개선돼야

원인규명 등 구조개편 시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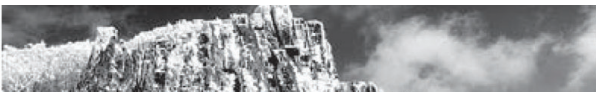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산업현장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다. 5월 17일 오전 7시 11분, 정련공정의 산업용 오븐에서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공장 내부를 휩쓸었고, 가연성 자재와 고온설비가 밀집된 2공장은 순식간에 전소됐다. 화재 진압에는 대형 방수포, 고성능 화학차, 산림청 헬기까지 총동원됐다. 검은 연기가 수킬로미터 뿜까지 확산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 180여 명이 대피했다. 유해물질 노출 우려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오염수 유출 차단 조치도 취해졌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다. 현장에는 시설 노후, 예방 시스템 미비, 인력 부족이라는 삼중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고온공정에서의 설비 점검 체계, 초기 대응 인력 배치, 소방 안전 장비의 사전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교훈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고 이후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기업의 자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다. 납품 지연과 협력업체 피해를 막고 노동자 생계를 지키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 관리와 예방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물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닌 경고다. 산업현장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공간이다. 지금이야말로 낡은 안전 시스템을 뜯어고칠 마지막 기회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모두가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서석대



시인, 노래하는 투사, 사회비평가, 생명운동가…. 음유가객 정태춘에게는 따라붙는 수식어들이 참 많다. 그러나 정태춘은 분명 대중가수다. 1978년 1집 앨범 ‘시인의 마을’을 내면서부터 줄창 노래를 했다. 세 살 터울 아내 박은옥과 함께 무대에 선 세월만 50년이다.

그가 앨범을 열세번이나 내는 동안 크게 히트한 곡들도 많다.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 ‘서해바다’, ‘촛불’, ‘애고 도술전야’ 등은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곡들이다.

정태춘의 노랫말은 하나하나 산문에 가깝다. 음색도, 창법도 이채롭다.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대단한 음악적 양식이다.

정태춘의 노래 가운데 ‘5월이 되면 꼭 듣고 싶은’, ‘아니 꼭 따라 불러야만 될 것 같은’ 곡이 있다. 1996년 정태춘이 광주에 내려와 5월 영령들이 묻힌 망월묘역에서 처음 선보인 노래 ‘5.18’이다.

광주항쟁을 서사처럼 써 내려간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비탈에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칸나보다 붉은아보다 더욱 붉은 저 꽃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그 꽃들 베어진 날에 아 빛나던 별들/ 송정리 기지촌 너머 스러지던 햇살에 떠오르는 헬리콥터 날개 노을도 찢고, 붉게/ 무엇을 보았니 아들이, 나는 옥상 위의 저

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이,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릴 들었소/ 아, 우리들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80년 5월 광주항쟁으로 소려거 간 영령들은 보듬는 애달픈 노래는 계엄군의 군홧발 소리로 시작해 상여소리같은 진혼으로 끝이 난다.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것은 정태춘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모 방송국 ‘열린음악회’이다. 그리고, 다시 가슴으로 들은 것은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 노무현이 잠든 봉하마을 음악회였다.

이날 대중들은 바보 노무현에 대한 그리움과 참혹했던 그날의 광주항쟁이 오버랩되며 너나 할 것 없이 굵은 눈물을 흘렸다.

세월이 무심하다. 45년이 속절없이 흘렀다. 이팝꽃 피어나는 5월이 다시 왔지만, 망월묘역 두 동강 난 전두환 비석을 발로 밟고, 최루탄에 눈물흘리면서도 부사리처럼 날뛰는 백골단에게 찡돌을 던졌던 세대들의 ‘5월 기억’도 이젠 박제화됐다.

5.18을 두고 왜곡과 폄훼를 일삼는 인간말종들의 패악질이 지금도 고치질 않는다. 지나온 세월이 아쉽고 5월 영령들에게 죄스럽다. 속히 세상이 바뀌어 5.18이 헌법전문에 실리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그 전문을 소년들의 무덤 앞에 묻어야만 한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